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강기정 광주시장, 장성군민과 첫 통합 토론
햇빛연금·30분 대도시 생활권 등 전략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전남도민 소통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갖고, “통합 후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도민과의 상생토크’의 첫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만나 지역적 특성이 담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김한종 장성군수, 이정선 시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광주·장성 연계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합 이후 장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첨단3지구와 결합해 인공지능(AI) 데이터특구로 발전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한 30분 대도시 생활권 형성 △광주다음통합돌봄 확대 △‘햇빛연금’인 영농형태양광 확대 △신너 협관센터 중심 의료클리스터 조성 △생태·농업·관광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장성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심뇌혈관 특화 인공지능(AI) 첨단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주와의 의료 연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참석 주민들과의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통·의료·일자리·지역화폐·개발

제한구역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연장, 간선도로 확충 등 교통 연계를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려 장성의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부족 문제를 제시하며 통합 이후 광주 의료체계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통합되면 장성은 30분 생활권의 대도시 기반시설과 연결돼 교통·의료·문화·전반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며 “광주전남 통합으로 장성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 장성을 더 따뜻하고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시작으로 30일 여수시, 다음달 5일 영광군 등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에 참석해 전남도민들에게 광주전남 통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전남광주시특별법, 오늘 민주당론으로 발의

충남대전특별법도…행안위 심사 거쳐 내달 본회의 통과 목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전남광주시 특별법)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설치에 관한 특별법(충남대전시 특별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30일 밤의된다.

29일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위원회(단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전남광주시특별법과 충남대전시특별법이 30일 당론으로 밤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회부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2일 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2일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의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광역행정통합을 담은 두 특별법을 다른 법안에 앞서 최우선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양부남·김원이)는 지난 28일 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에 지역구 의원 18명이 공동 서명한 전남광주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도 이날 오후 충남 대전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시 특별법과 충남대전시 특별법의 각각 다른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법안 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광주전남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의 논의는 특례 조항과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지역민의 의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은 30일 두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밤의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은 “전남광주시 특별법은 늦어도 설 전까지 행안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회 폐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절차 이행은 물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자치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정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확정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의 청사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회인 행정성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여 통합특별시의 주정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행정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군소정당 원내 진입 가능성 커져

현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현재는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 군소정당들의 원내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29일 군소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

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

견에서는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런 우리 정치현 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 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민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 호남고속도 확장공사 시민불편 최소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부분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공사 시민설명회’를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3차례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시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계획, 교통 소통 대책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1면 ‘광주 라마다 호텔’서 계속

시·도공, 시민설명회…2월 3~5일 3곳서 순차 동광주IC~광산IC 총 11.2km 6차로 확장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총 7934억원을 투입해 동광주IC부터 광산IC까지 총 11.2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도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다.

이 구간에는 동광주IC, 용봉IC, 서광주IC, 동림IC, 산월IC, 광산IC가 포함되며, 공사는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의 병목 현상과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교통흐름 개선과 물류비 절감, 시민 이동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 설명회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4일 오후 2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5일 오후 2시 신창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사 구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총 3차례 열린다.

광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사 구간별·단계별 추진 일정과 시공 방식, 교

통소통 대책, 시민 협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서숙현 시 도로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행 불편에 대비해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기독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내년 7월까지…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지원

광주기독병원은 광주시의 ‘동남권 공공심야어린이병원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공공심야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 진료 취약 시간대에 전문 외래진료를 제공, 보호자의 의료 이용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과 박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의료 사업이다.

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기독병원은 2023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동남권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늦은 밤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육아휴직’ 단기 1~2주 단위로도 사용

국회 의결…기준 기간서 차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국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 중대재해인 경우만 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신재까지 확대된다. 오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된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예전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올해 제헌절부터 “빨간날”이 적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